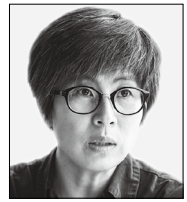


# 아무도 꿈을 묻지 않은, 아이들을 살릴 시간



## 세상 읽기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바다가 끝내 삼켜버린 소년들의 시신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다. 소리와 나지 같은 보드라운 것들은 죽은 소년의 몸에 붙어 눈구멍부터 파먹었다.”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구술 기록집 《아무도 내게 꿈을 묻지 않았다》의 한 대목이다. “머리에 방망이가 날아가서 골이 탁 터졌거든요. 애가 눈이 탁 터지면서 바로 탁 쓰러지는데 부들부들하는 거예요. 머리는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런데 조장이 그런데도 막 패요.” 형제복지원 한종선씨의 기억이다. 종선씨는 9살, 누나는 12살에 그곳에 끌려갔다.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부랑인’ 단속 지시가 내려졌다. 구두를 닦거나 껌을 파는 소년들,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든 사람들이 경찰과 공무원에게 잡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이라며 자녀를 맡긴 사람도 있었다. 가난한 종선씨의 경우다. 1987년 겨울 울주군의 야산에서 썰 사냥에 나선 젊은 겁사가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강제노역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김유원 검사가 형제복지원을 급습하기 전까지 3천명의 사람이 끌려갔고, 사망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다. 2006년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7월과 8월 전남 나주경찰서(나주부대) 소속 경찰관들이 해남읍과 완도읍 등 5곳에서 주민 35명을 학살했다’고 발

표했다. 나주부대는 인민군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인민군 환영대회에 나가 지 않으면 화를 입을까봐 환영장에 나간 주민들을 살해했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주민을 희생시키는 과정에 어떠한 법적 처리 절차도 없는 임의처형이었다’고 밝혔다. 1992년 8월29일 한 노동자가 실종됐다. 군대에 끌려갔는지 공안당국에 잡혀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다. 의문사위는 시흥역에서 열차 사고로 사망한 신원불상의 변사자가 박태순임을 확인했다. 기무사가 사망 당일까지 미행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문규현 신부와 임수경씨가 판문점으로 내려오던 날, 1989년 8월15일 거문도 해수욕장에 시신 한구가 떠올랐다.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이었다. 맨몸에 바지 혁대도 없었고 이마 오른쪽에는 골절상이 있었다. 경찰은 ‘이내창이 머리를 식히려 거문도에 내려가 암석 해안을 거닐다 발을 헛디뎠다 추락해 죽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문사위는 이내창이 안기부 직원과 동행했고 사망 시점에 현직 군인들이 같은 장소에 머물렀음을 발표했다. 국가기관이 밝혀냈고, 더 밝혀내야 할 과거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근거로 활동하다가 2010년 해산할 때까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활동했다. 법에 의해 비극적 근대사에

사라진 사람들의 서사가 드러났다. 개정 입법이 필요했다. 아직 3천명의 미신청 유족이 존재하고 활동 종료 뒤 형제복지원, 선감도 같은 강제수용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도 더 필요하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의 경우는 유해 발굴조차 못 했다. 그러나 알다시피 국회는, 아니 자유한국당은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 법 통과만 하게 해달라 무릎 꿇고 호소하는 ‘나주부대 학살 사건’ 유족에게 나가선원 원내대표는 “저한테만 그러시지 말라”며 자리를 피했다. 법 통과를 위해 이미 너무 많은 법조항을 양보하며 매달리는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해서 안 되는 뻔뻔한 말이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 만에 의식을 잃었다며 요란 법석을 떨던 때, 한 남자가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의식을 잃었다. 크레인인 울라갔고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중학생 시절 빵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형제복지원에 끌려갔던 최수우씨다. 한국당이 방해하는 그 법을 통과시켜달라 호소하고 있었다. 당노를 앞에서도 24일 동안 물과 소금, 약간의 효소만으로 연명하고 있었다. 영하로 내려가는 위태로운 곳에서, 불도 난방도 없는 1인용 텐트에서 홀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시인은 말했다.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다.” 그러나 최수우의 과거는 오늘도 단절되어 있다. 수용소로 다시 끌려가지 않으려 목숨을 다해도 망쳤던 아이들을 살릴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 온전한 비정규직 실태 파악을 위하여



## 시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661만명이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올해 8월에는 748만명으로 87만명 증가했다. 전체 노동자를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비율은 33.0%에서 36.4%로 3.4%포인트 증가했다. 한해 87만명에 3.4%포인트 증가? 보수 언론과 일부 학자들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폭증했다’며 흥겨워(?)한다. 하지만 이견 말이 안 된다. 그래서인지 통계청도 국제노동기구(ILO)의 새 기준에 따라 병행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추가로 포착되었다고 해명했다.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꼬박꼬박 다시 분석해온 필자로서는 지난 한달간 몹시 궁금했다. 몇해 전까지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며칠 만에 원시자료를 구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한달쯤 지나서야 원시자료를 구할 수 있다. 마침내 원시자료가 공개되고, 사흘이 걸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보고서를 작성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8월부터 시작했으나 꼬박 20년 동안, 30번째로 나온 보고서다. 이번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은 2016년 874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 843만명, 2018년 821만명으

로 해마다 감소하다가 올해 8월에는 856만명으로 35만명 증가했다. 전체 노동자를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비율은 2016년 44.5%에서 2017년 42.4%, 2018년 40.9%로 계속 낮아지다가 올해는 41.6%로 0.7%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청은 87만명에 3.4%포인트 증가했다고 했는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5만명에 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 그것은 통계청이 추가로 포착했다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노동사회연구소는 장기임시근로라는 이름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비정규직으로 포착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간제가 80만명 증가하는 대신 장기임시근로가 52만명 감소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똑같은 자료를 분석했는데 통계청은 비정규직이 748만명이고 노동사회연구소는 856만명인 이유는 뭘까? 통계청은 한시근로, 기간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8개 문항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규직으로 분류한다. 그러다 보니 임시직과 일용직 108만명이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면 두말할 것 없이 비정규직이다. 세상에 임시직과 일용직이 정규직이라니? 통계청이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노동사회연구소는 장기임시근로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으로 분류해왔다. 통계청과 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규모와 추세가 다르고 실태가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가 완벽하게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의 조사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이주노동자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제노동기구의 새 기준에 따라 병행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포착되지 않던 비정규직이 새로이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부터는 국제노동기구의 새 기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가 큰 폭으로 개편된다. 그때는 비정규직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마다 감소하던 비정규직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이유는 뭘까? 87만명은 아니더라도 지난 1년 사이 35만명이 증가한 이유는 뭘까? 임금노동자가 50만명 증가하다 보니 비정규직도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다 보니 비정규직이 증가했다 등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좀더 근원적인 이유는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는 상시·지속적 일자리를 정규직 직접고용 공약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 사설

### ‘김진표 총리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곧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 후보자로 공식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이 그동안 보여온 행보가 촛불 민심을 계승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달 27일 ‘김진표의 총리 지명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법을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고 그 공으로 개신교계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실련은 26일 성명에서 “차기 총리는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며 “하마평에 오르코 있는 김진표 의원 등 후보자들이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문스타 사건’ 관련자 김진표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자는 대한민국 총리가 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통인

김 의원이 “총리 적임자”라는 의견도 우리 사회엔 물론 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정책 경험이 많은 것은 맞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핵심성장 등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는 마당에 그가 지금도 내각의 사령탑으로 적임자인지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그의 총리 기용은 개혁을 중단하고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청와대는 4선인 김 의원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도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안전한 카드’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가 총리 자질의 최우선 조건일 수는 없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후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를 이어가면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이 바람직하다. 청와대 게시판에 “김진표 의원의 총리 임명을 반대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문 대통령은 김 의원의 총리 기용에 왜 비판과 반대가 많은지 다시 한번 숙고하길 바란다.

###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원포인트 본회의’ 열라

자유한국당이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막은 데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검찰개혁법안 처리를 막는다면 29일 비쟁점 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써 국회 마비를 초래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게 옳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민생법안이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민식이법 등을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묵묵부답이다”라고 말했다. 여당의 국회 봉쇄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인데, 원인과 결과를 교묘히 섞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면피성 발언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자유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어기고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이다. 선진화법은 소수 정당을 위해 필리버스터를 두고 있지만, 이는 첨예한 쟁점 법안을 위한 것이다.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건 민생을

בלד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막가파식 변칙 플레이’에 해당한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건 중에는 자유한국당 동의 아래 법제사법위원회와 통과된 법안 70여건, 자유한국당 의원 단독으로 낸 법안 20여건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것만 봐도 이번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선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행사해 법안 통과 여부를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의 우선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도 자유한국당 탓만 하며 민생법안 처리를 마냥 미뤄서는 안 된다.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설득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180여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쟁점 법안에 한해서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수사관 죽음, 검찰 ‘정도 수사’로 ‘하명’ 여부 밝혀야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 수사’ 지시 여부를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조사를 앞둔 검찰 수사관 백아문씨가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백씨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으로, ‘하명 수사’ 여부를 밝혀줄 열쇠를 전 인물로 알려져왔다. 수사를 둘러싸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백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등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을 방문했다고 한다. 이 일로 울산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았고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가 최근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거나 검찰의 별건 수사를 받았다는 등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검까지 실시했으니 수사기관은 그의 죽음을 놓고 더 이상의 억측이 나돌지 않도록 서둘러 진상을 밝혀야 한다. ‘하명 수사’ 여부에 대한선도 보도가 쏟아지지만 정황은 엇갈린다. 일부 언론은 황윤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 첩보를 받기 전부터 김기현 시장에 대한 정보보고를 지시하는 등 청와대 특명을 받고 기획수사를 가능했다고 보도했다. 또 황 청장이

지난해 1월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따로 만났다는 주장도 됐다. 황 전 청장은 ‘저급한 허위 보도’라며 “검찰이 여론 조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검찰의 ‘혐의 유희’를 비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해 초 울산경찰청이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할 때 고발 대상자에 김 시장도 포함돼 있었으나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바꿔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울산지검이 김 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첩보를 내사하다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 중단했다는 보도도 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다. 검찰은 이른바 청와대 ‘백원우팀’의 선거 개입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반면,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검찰도 수긍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놓고 이제 와서 선거개입 수사라는 건 자가당착이라 반박한다. 당사자인 김기현 전 시장은 2일 경찰과 청와대가 선거개입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여당 쪽에선 검찰이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의심한다. 검찰의 ‘정도 수사’를 다시 당부한다.